

5장 18조 '광주인권현장' 공식 선포

아시아 지자체 최초…실천 장치 마련·조례개정 등 추진

광주시가 21일 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인권현장'을 공식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장치 마련과 조례 개정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제47회 시민 대화합의 날'에 맞춰 시민 공동체의 인권증진을 위한 광주인권현장을 선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생,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18명의 시민은 이날 전문과 5장 18조로 정립된 광주인권현장을 공식 선포했다.

선포식은 추진경과, 현장난독, 각계 축하영상 메시지, 축가(사람이 꽂보다 아름다워) 순으로 진행됐다.

1998년 아시아인권위원회 주도로 아시아인권현장이 광주에서 선포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의 현장을 제정 선포한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과 호주 각 1개 도시만이 인권현장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에 기반한 '창조적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와 시민의 열망, 의지를 담은 역사적 선언이라고 시는 의미를 설명했다.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광주인권현장과 인권지표가 실효성을 거두어 광주가 세계속의 인권도시로 확고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

도록 후속 조치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광주인권현장과 인권지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시민 삶 속에서 녹아내리도록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인권지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 기관·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지표가 실

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움보즈먼제도 또는 새로운 독립적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현재 구성된 인권증진 위원회에 권고적 기능을 부여해 위원회가 침해사례를 접수한 뒤 개선사항을 마련됐다.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

은 시인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인권지표에는 5대 영역 18대 실천 과제, 100개 세부항목을 담았다. 이

지표는 광주인권현장이 시민 생활 속

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제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측정과 실천의 도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1일 제 47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5개 구청 주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인권현장' 전문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1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현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성별·연령·종교·장애·국적·출신 지역·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현장을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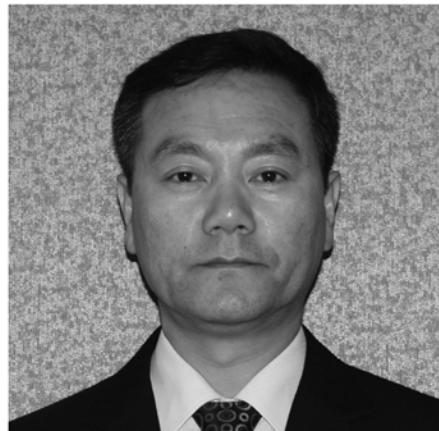
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

지를 전명한 광주인권현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광주인권현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518자(字)로 만들어진 전문과 5장 18조로 제정된 본문, 부칙 형태인 '현장의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삶의 경험 인정·존중 노력에 동참 다짐"

공금 횡령 피의자 수배 [현상금 3,000만원]



※ 사건개요

피의자 김국태(사진, 53세)는 2012년 1월 17일,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의 거래은행에서 공금 35억원을 인출하여 도주함.

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포상금(삼천만원)을 지급하며 모든 비밀과 신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처 112 *

부천원미경찰서 ☎(032)680-7126

부천원미경찰서장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 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姜시장 "대통령 5·18 기념사 생략은 잘못"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기념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5·18 행사에는 대통령이 직접 오거나(대통령)기념사를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엔 아무런 상의없이 총리 기념사로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내년에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도록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18기념식에는 이명박 대

통령이 4년째 불참한데다 총리가 대독하던 기념사로 빠져 '광주 홀대' 논란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었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 뜻대로 '입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행사에 포함된 것은 자랑스럽다"면서도 "보훈처 태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문을 통해 합창을 요구했는데 회신도 없고, 어색한 장면만 연출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재창을 견의했고, 또 그렇게 할 줄 알고 일어났는데 보훈처장은 앉아 있다더라"며 "앞으로는 앉아서라도 부를 수 있도록 사회자 멘트에 넣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8일 기념식 당시 '입을 위한 행진곡'이 다른 공연과 일괄적으로 이어진 데다, 강 시장과 5월단체 회장 등 몇 명만이 노래를 부르려 일어서는 무안한 상황이 연출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8일 만에 정상화된 수돗물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신속한 조치 등이 중요하다"며 "빠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헬시플라워쇼에 홍보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전에 들어갔다.

순천만정원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2~26일 열리는 2012 영국 헬시플라워쇼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홍보관은 2011 헬시플라워쇼에서 '해우소 가는 길'로 최고상을 받은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디자인했다.

올해 185주년을 맞은 헬시플라워쇼는 매년 5월 영국 런던의 랜즈 강변에 있는 로열 병원 정원에서 열린다. 매년 15만7000장의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세계 최고 권위의 정원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송정역세권 개발대책추진위 구성키로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

(가칭) '송정역세권 개발 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광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은 21일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송정 역세권 개발과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주민대표, 상인, 공무원, 광산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송정역세권 개발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점 추진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방안과 송정권 구 도심의 활성화와 도시환경정비 적극 추진, 광

주역과 이원화된 KTX 정차역 송정역으로 단일화 등이다.

박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달 중 송정역 주민대표, 광산구청 공무원, 광산구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가칭 '송정역세권 개발 대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향후 추진위가 구성되면 낙후된 송정역세권 개발 방안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동구·광산구 23.82㎢

정부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지난 4월 말 현재 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8㎢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69㎢이고 시·도지사 지정이 70.99㎢이다.

광주의 경우 시장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6㎢이며, 전남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과 신안 조선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58.72㎢가 도지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 4월 말 현재 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8㎢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69㎢이고 시·도지사 지정이 70.99㎢이다.

광주의 경우 시장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6㎢이며, 전남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과 신안 조선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58.72㎢가 도지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青 '저축銀 연루의혹'

선임행정관 대기발령

청와대는 21일 김경한(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부탁에 따라 그의 형에게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과 관련, 김 선임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선임행정관은 이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마찰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성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와 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